

# 군·경 성폭력 범죄 첫 기록 성과...헬기사격은 모호한 결론

##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의미와 한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2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는 성과만큼 한계도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고, 광주 지역사회가 지적한 개별보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표명령자 등 핵심 정점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부실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 ◇군·경 성폭력, 총상 사망자 등 새롭게 규명

보고서의 성과로는 최초로 정부 주도 조사보고서에 군·경 성폭력 사실을 기록한 점,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확인 사살'하고 '조준 사격'하며 학살을 자행했다는 기록을 남긴 점 등이 꼽힌다. 무장시위대뿐 아니라 시위와 무관한 시민까지 임의처형(현장 사살)한 사실 등도 새롭게 규명했다.

기존에 사망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104건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사인, 사망장소 등 사망 경위를 새롭게 정정했다.

피격 부위가 한 곳인 '단발 총상 사망자' 88명 중 84명(95.5%)이 상체 부위를 피격당한 사실을 확인해 계엄군의 자위권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밝혀냈다.

지만원씨 등 5·18 왜곡 세력이 제기해 온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발표 명령에 윌선이 개인인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의 발표'를 넘어서 학살을 자행했음을 명시하는 등 성과도 냈다.

보고서에는 5월 19일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표포탄 경위와 관련, 시위대가 위협 사격을 받아

민간인 확인사살 등 학살 기록 남겨 시민 임의처형 사실도 새롭게 규명 잘못된 사인·사망경위 104건 정정 '윌선 명령 받아 집단발포' 명시

발포 명령자는 끝내 특정 못해 국가 은혜 의혹, 기존조사 답습 그쳐

50여m 정도 도망친 이후에도 계엄군이 M16 소총으로 시위대를 향해 연발 사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도망치는 시위대에 적격탄으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위협사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다.

계엄군이 최초로 집단발포를 한 5월 20일 3공수 여단의 발포와 관련해서도 '윌선'의 명령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못박았다. 당시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이 윌선과 통화를 한 후, "위급상황에는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명시한 것이다.

## ◇보고서 초안 왜곡우려 일부 보완

지난 3월부터 공개된 개별조사보고서에서는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 권용은 일병을 압사시킨 장갑차가 계엄군의 것인지, 시위대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돼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일병 사건은 "시민군이 계엄군을 먼저 공격해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는 계엄군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광주교법 판결을 근거로 '계엄군 장갑차 후진 과정에서 권용은 일병이 장갑차에 압사당했다'고 명시돼 우려를 가라앉혔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월 20일 신안사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에 의한 정관철 중사 사망 사건은 밤 11시 이후 일어났다고 특정해 계엄군 발포 이후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민군의 무기와 오전 피탈설과 관련해서는 나주 남평지서의 경우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상황' 등을 근거로 오후 1시 30분에 예비군무기와 동시에 피탈했다고 기록했다.

나주 남평지서의 경우 오전 피탈 기록이 '전남도

경 상황일지'에서만 나오고, 다른 기록에서는 오후 5시 40분~오후 6시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다수의 기록과 진술조사에 반남지서 피습이 한 차례만 이뤄진 것으로 적혔다는 점을 들어 '오전·오후 2회 피습설'을 담은 '전남도경 상황일지' 내용을 반박했다.

## ◇핵심 의혹 규명 아쉬움 남겨

끝내 발표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남

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 발포는 자위권이 공식적으로 발령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육군 예규'를 위반한 무단 발포이며, 같은 날 오전 8시 전교사령관이 광주와 전남·북지역을 대상으로 진돗개 '하나'를 발동하고 일부 병력에게 살탄을 분배하면서 도청 앞 발포로 이어지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발포와 관련된 상하 위계를 비롯해 군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과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5월 21일 광주전 불로동다리 상공에서 이뤄진 500MD 헬기 사격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 사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불명확하게 기술했다.

5월 22일 조선대 일대에서 AH-1J 코브라 헬기 사격, 5월 27일 전남도청 일대 사격에 대해서도 '사격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를 썼다.

국가 차원의 왜곡,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

진상조사위는 군 기록 왜곡을 자행한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 등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목적 또는 여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왜곡되지 않은 군 문서 등 원본도 찾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암매장과 관련해서도 암매장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새로운 암매장지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지목한 장소 대부분에서 지질과 지형의 변화로 매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무연고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찾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제대로 검증 안된 진술 조서, 새로운 왜곡 불씨 우려

### 부실 조사 논란 여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내렸지만, '새로운 왜곡의 장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보고서 대국민보고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추천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추천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이 내놓은 성명서에서도 새로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첩·이동욱·차기환 위원은 24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대국민보고회'를 3시간여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4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었다.

이들은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중지를 찍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일부 조사내용에 반대의견을 담아 A4용지 77

무기고 습격 시간 등 소수 의견 왜곡세력 입맛 따라 악용 가능성

장 분량의 성명을 밝혔다. 하지만 5·18전문가들은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한 3명 위원들부터 조사결과를 가지고 5·18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인 위원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이전에 시위대가 무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가장 큰 왜곡으로 꼽았다.

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는 진상조사위의 부실한 조사가 발미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인의 위원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든 것이 당시 시민 5명의 진술이었다는 점에서도.

진상조사위에서 진술을 받을 경우 조서의 내용에 대해 신빙성 여부를 따지고 평가를 해야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진술조서를 무작정 받기만 해

새로운 왜곡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내부 관계자도 "계엄군 진술조서 뿐 아니라 40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한 시민들의 진술조서까지 아무런 검증 없이 조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부실 조사결과와 일부 소수 의견들이 왜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고 습격 시간, 옛 전남도청 앞 권용은 일병 사망원인, 헬기사격 준비, 성폭력사건, 북한군 침투 등에 대한 소수 의견 등이 진술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왜곡세력이 자신의 시선에 맞는 진술조서 일부를 활용해서 다시 왜곡을 재생산할 여지를 남겼다는 주장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한 5·18 연구자는 "검증되지 않은 진술조서가 어떻게 왜곡의 소재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이런 방식의 왜곡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미완의 5·18 진상규명, 지속적인 조사 필요"

### 오월단체·시민단체 반응

광주 시민사회가 24일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대해 "왜곡 불씨" 우려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월정신자기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오월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앞서 발간된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월대책위는 진상조사위가 개별조사보고서에서 지적받은 오류 및 왜곡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반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 탓에 5·18 왜곡 세력이 개별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왜곡 주장을 펼쳐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오월대책위는 "24일 보수 측 진상조사위원 3명은 개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5·18 왜곡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진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개별조사보고서가 이후로도 어떻게 왜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종합보고서는 5·18 관련 첫 국가 차원 보고서라는 점에서 뜻깊으나, 발표명령자와 암매장 등 핵심 조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개별조사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도 말끔하게 반박하지 못했다"며 "종합보고서와 별개로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왜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미진한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5·18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광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제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간 차원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성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